

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9. 9.(목) 12:00	배포일시	2021. 9. 9.(목) 8:00
담당과장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박철건(044-215-5740)	담당자	김영웅 사무관 ssuper84@korea.kr
	재정혁신국 재정제도과장 정남희(044-215-5490)		김선영 사무관 ksunny3@korea.kr
	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최영전(044-215-4120)		박재홍 사무관 pjh10220@korea.kr
	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장 박재형(044-215-7530)		정지운 사무관 jiun.chung@korea.kr
	국고국 국채과장 김이한(044-215-5130)		박혜강 사무관 hkpark57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(044-215-5330)		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@korea.kr
	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이보인(044-960-6160)		김경중 사무관 rudwnd@korea.kr
			신대원 서기관 recallme@korea.kr

##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1년 9월호 ('21.7월말 기준)

◇ 7개월 연속 재정수지 개선흐름 지속, 재정적자(누계)가  
전년동기대비 1/3미만으로 대폭 축소

→ 「확장재정→경제회복→세수증대→재정건전화」 재정 선순환 공고화

□ 기획재정부는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9월호를 발간하여  
재정운용 동향 및 주요 재정사업 성과 등 발표

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,

○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 
경제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,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세수  
호조,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

\* 위기직전('19.4분기) 대비 2분기 GDP 규모 : (한국)101.4 (미국)100.8 (일본)98.5 등

-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지속 등으로 국세\* 등 총수입 증가  
추세 연속(+76.5조원)

\* 국세 증가폭(전년동기대비, 조원) : (1월)+2.4 (2월)+8.7 (3월)+7.9 (4월)+13.8  
(5월)+10.8 (6월)+5.2 (7월)+6.3

- 이에 따라,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동기대비 1/3 미만으로 축소  
(‘20.7월 △75.6 → ‘21.7월 △20.7조원)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 
뚜렷이 가시화

- 또한, 고용충격완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7월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직전('20.2) 99.4% 수준(2,751→2,735만명)을 회복하는 등 고용시장 개선흐름\*도 지속

\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1.2)53.2 (3)12.8 (4)6.8 (5)10.1 (6)1.8 (7)2.0

- 안 차관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,
-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집행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
- 또한, 포용적인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가면서도
- 경제회복 추이에 맞추어 지출증가율 단계적 조정, 재정준칙 법제화 등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힘

□ 한편, 9월호의 주요재정 이슈로는,

- ① 지역주도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추진 방향
- ② 고령화 시대 노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
- ③ 중앙-지방 상생을 위한 1,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내용과 시사점 등 외부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기고문을 게재하였음

## 【'21.7월(누계기준) 재정운용동향】

◇ (총수입) 국세수입(223.7조원) 등 356.9조원 (전년동기대비 +76.5조원\*)

\* (국세)+55.1 (세외수입)+1.8 (기금수입)+19.5조원

◇ (총지출) 소상공인 피해지원, 사회안전망 강화, 코로나 방역 대응 등을 중심으로 377.6조원 집행(전년동기대비 +21.6조원)

- 2차 추경으로 총지출 규모가 확대(+32조원)되어 진도율이 작년에 비해 낮으나\*, 8월 이후 집행이 본격화되어 빠르게 개선될 전망

\* '20년 진도율(64.2%)에 비해 '21년 진도율(62.4%)은 △1.8%p 낮음

◇ (재정수지) 통합재정수지 △20.7조원(전년동기대비 +54.9조원)

- 빠른 세수회복세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동기대비 1/3 미만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가시화

□ **(총수입, 356.9조원)** 빠른 경제회복, 자산시장 호조 지속 등으로 세수 증가세도 지속

- 다만, 금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재확산, 부동산·주식거래 증가세 둔화\*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는 완화된 전망

\* 주택매매거래량(만호, 전년대비): ('20.11~'21.5월) 72.7 (+5.0%) ('21.6~7월) 17.8 (△36.5%)

\* 증권거래대금(조원, 전년대비): ('20.12~'21.6월) 4,413 (+80.9%) ('21.7월) 579.6 (+5.6%)

① (국세, 223.7조원) ①빠른 경기 회복세, ②자산시장 호조, ③기저효과·우발세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진도율 122%p 증가(+55.1조원)

※ 세정지원 기저효과 +11.9조원 제외시 실질적 증가수준은 +43.2조원

- 이월납부: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으로 이월되어 납부

- 납부유예: 작년 1~7월 납부의무세액이 8~12월로 유예되어 비교대상인  
작년 1~7월 납부세액 감소

- (①경기회복)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(+10.9조원), 부가가치세(+9.0조원) 등이 전년동기대비 +25조원 증가

\*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, 개별기준): ('19) 56.3 → ('20) 67.5 <+19.8%>

소매판매액지수(전년동월비, %): ('21.1) 0 (2) 8.2 (3) 11.1 (4) 8.7 (5) 3.1 (6) 1.6

- (②자산시장 호조) 부동산·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(+9.1조원), 증권거래세(+2.2조원)·농특세(+2.3조원) 등이 전년동기대비 +15조원 증가

- (③기저효과·우발세수) 세정지원 기저효과(+11.9조원), 상속세 등 우발세수(+2조원)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+14조원 증가

· 7월 당월 기준 교통세(△1.2조원), 주세(△0.4조원)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등 하반기부터 세정지원 기저효과\*가 점차 소멸

\* (4월)+8.8 (5월)+11.1 (6월)+13.3 (7월) +11.9조원(6월대비 △1.4조원)

② (세외수입, 17.8조원) 한은잉여금(+1.4조원, 2월 세입조치),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(+0.3조원, 4월 세입조치)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진도율 1.4%p 증가(+1.8조원)

- 다만, 7월 이후에는 '20년 부과금 및 과징금\* 유예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증가폭 둔화 가능성

\* '20년 코로나 위기업종 지원을 위해 정유업계 석유수입·판매 부과금('20.4월, 4~6개월분) 및 항공업계 과징금('20.2월, 1년간) 유예

③ (기금수입, 115.4조원)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(+15.3조원), 사회보장기여금(+2.6조원)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진도율 9.8%p 증가(+19.5조원)

-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3.6조원(11.6→25.1조원, +117.7%) 증가

\* '21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7.49%(전년동기대비 +7%p)

- 기금수입 진도율(67.5%)이 통계작성('13년) 이후 가장 높은 수준\*

\* 기금수입진도율(7월, %, 최근5년) : ('16)56.1 ('17)56.3 ('18)55.7 ('19)57.6 ('20)59.2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
	추경 (A)	결산 (B)	7월 (C)	7월 (누계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7월 (H)	7월 (누계I)	진도율 (J=I/G)	7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예산 (J-E)	결산 (J-F)
□ 총수입	470.7	478.8	54.4	280.4	59.6	58.6	514.6	58.3	356.9	69.4	3.9	76.5	9.8	10.8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35.6	168.5	60.3	59.0	314.3	41.9	223.7	71.2	6.3	55.1	10.9	12.2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34.0	163.5	60.2	59.2	304.6	40.4	216.3	71.0	6.5	52.7	10.8	11.8
- 소득세	88.5	93.1	8.1	48.9	55.3	52.5	99.5	11.1	71.4	71.7	3.0	22.4	16.4	19.2
- 법인세	58.5	55.5	1.5	30.8	52.7	55.5	65.5	2.0	41.7	63.6	0.5	10.9	10.9	8.1
- 부가가치세	64.6	64.9	17.4	48.4	74.9	74.6	69.3	21.2	57.3	82.7	3.8	9.0	7.8	8.1
- 교통세	15.5	13.9	2.5	8.7	56.4	62.6	15.7	1.3	10.3	65.4	△1.2	1.5	8.9	2.8
- 관세	7.7	7.1	0.4	3.9	51.1	55.8	8.3	0.9	4.7	56.9	0.5	0.8	5.8	1.1
- 기타	37.2	41.8	4.1	22.8	61.3	54.5	46.2	4.0	30.9	66.9	△0.1	8.1	5.6	12.4
○ 특별회계	7.8	9.3	1.6	5.0	63.9	54.0	9.6	1.5	7.4	76.5	△0.2	2.4	12.6	22.5
◇ 세외수입	29.1	26.9	2.9	16.0	55.0	59.5	29.3	1.4	17.8	60.9	△1.4	1.8	5.8	1.4
◇ 기금수입 (사보기금)	161.9	166.2	16.0	95.8	59.2	57.6	171.0	15.0	115.4	67.5	△1.0	19.5	8.3	9.8
	95.8	100.0	7.4	56.8	59.3	56.8	99.5	9.0	74.7	75.1	1.7	17.8	15.7	18.2

\* 국민연금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

□ (총지출, 377.6조원) 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,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동기대비 +21.6조원 증가

○ 2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 규모 확대(572.9→604.9조원 +32조원)로 진도율(62.4%)은 전년동기대비 △1.8%p하락 하였으나,

\* 1차 추경 기준으로는 진도율이 전년동기대비 1.7%p 증가

- 8월 이후 희망회복자금,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어 총지출 진도율도 빠르게 개선될 전망

○ 7월 당월 기준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8.2조원 감소

- '20년 3차 추경 집행이 집중된 '20년 7월 대비 기저효과\*, 금년 역대최고 수준(68.2%)의 상반기 조기집행, 2차 추경예산의 7월말 (7.24) 국회통과로 인한 7월 미집행 등에 기인

\* 연도별 7월 집행액(조원) : ('16)25.9 ('17)25.7 ('18)35.4 ('19)33.7 ('20)40.1 ('21)31.8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7월 (당월 C)	7월 (누계 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7월 (당월 H)	7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*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7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지출	554.7	549.9	40.1	356.0	64.2	64.7	604.9	31.8	377.6	62.4	△8.2	21.6	△1.8
○ 예산	377.5	374.4	27.2	255.9	67.8	68.4	409.7	21.0	259.5	63.3	△6.2	3.6	△4.5
- 일반회계	323.5	320.8	25.2	219.1	67.7	68.3	348.8	19.2	216.8	62.2	△6.0	△2.3	△5.6
- 특별회계	54.0	53.6	2.0	36.8	68.2	68.6	60.9	1.8	42.7	70.1	△0.2	5.9	1.9
○ 기금	177.3	175.2	12.8	100.0	56.4	57.1	195.2	10.8	115.8	59.3	△2.0	15.8	2.9
(사회보장성기금)	61.2	59.1	5.4	34.3	56.1	58.0	63.2	5.3	38.4	60.8	△0.1	4.1	4.7
○ 세입세출외*	-	0.4	0.0	0.1	-	31.9	-	0.0	2.3	-	△0.0	2.2	-

\*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

□ (재정수지) 총수입 개선흐름 지속으로 7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크게 개선('20.7월 △75.6 → '21.7월 △20.7조원, +54.9조원)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7월 (당월 C)	7월 (누계 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7월 (당월 H)	7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7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수입(A)	470.7	478.8	54.4	280.4	59.6	58.6	514.6	58.3	356.9	69.4	3.9	76.5	9.8
◇ 총지출(B)	554.7	549.9	40.1	356.0	64.2	64.7	604.9	31.8	377.6	62.4	△8.2	21.6	△1.8
◇ 통합재정수지 (C=A-B)	△84.0	△71.2	14.4	△75.6			△90.3	26.5	△20.7		12.1	54.9	
◇ 사회보장성 기금수지(D)	34.6	40.8	2.0	22.5			36.2	3.7	36.2		1.7	13.7	
◇ 관리재정수지 (E=C-D)	△118.6	△112.0	12.4	△98.1			△126.6	22.8	△56.9		10.4	41.2	

□ (국가채무) 1~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.0조원으로, 年발행한도 (186.3조원)의 66.6%를 평균 조달금리 1.71%\*로 안정적 소화

\* 1~7월 조달금리 1.71%는 과거 평균('16~'20년: 1.84%) 대비 낮은 수준

\*\* 7월 중앙정부 채무는 914.2조원(국고채 819.9, 주택채 81.2, 외평채 10 등)

※ 2차 추경예산 기준 '21년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 : 937.8조원



- 국고채는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 진도율이 과거 평균\*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,

\* '16~'20년 1~7월 평균진도율: 65.4%

-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,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1~7월 중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(26.5조원)

\* 1~7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'18)+11.7 ('19)+7.6 ('20)+19.5 ('21)+26.5

\*\*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은 '21.7월 기준 18.1%로 지속 증가 중

↳ ('18말)15.2% ('19말)16.0% ('20말)16.7%

## 【주요 재정사업 및 성과('21.7월 누계기준)】

- ◇ 위기극복 및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1,2차 추경사업 적극 집행
- ◇ 코로나 방역대응, 고용충격 완화와 함께 한국판 뉴딜 등 미래대비 재정투자 집중 집행

### □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 적극·신속 집행

- 1차 추경사업의 5개 현금지원사업(5.5조원)\*은 8월말까지 대부분 지급 완료\*\* (97%)

\* (버팀목자금\*)291만명 (긴급고용안정지원금)71.5만명 (법인택시기사)7.8만명 (방문·돌봄종사자)3.4만명 (전세버스기사)3.0만명

\*\* 그 외 지원자 사후 관리 및 인건비, 전산운영비 등 집행 중

- 2차 추경사업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\*(14.9조원)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시에 집행되도록 추진 중

\* 상생 국민지원금(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별도 포함), 희망회복자금, 상생 소비지원금

-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9.6일까지 273만명에 대해 2,735억원(92.4%)을 지급하였으며, 상생 국민지원금은 9.6일 집행 개시하여 9월말까지 90% 이상 지급 추진
- 희망회복자금은 9.6일까지 170만 소상공인에게 3.7조원(88.1%) 지급, 상생 소비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시기 결정 예정

## □ 국민의 안전 제고를 위한 코로나 방역대응 예산 적시 집행

-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·치료 강화와 함께 감염병관리 인프라 확충 등 K-방역 고도화 추진
  - 7월말까지 생활치료센터를 69개로 확충(연말까지 31개소 추가 개소),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해 전국 350개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집행(1.6조원)
  - 치료제 등 방역물품 선제 확보·보급과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선제적 진단검사\* 대폭 확대(일17만건→최대 30만건)
- \* 학교, 요양시설, 사회복지시설, 다중이용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
- 17개 시·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및 4개(호남, 충청, 경남, 경북)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완료(25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예정)

## □ 뉴딜 성과창출 가속화 및 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 집행 역점

-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조기집행 노력으로 7월말 기준 '21년 뉴딜 예산 22.5조원 중 16.7조원\*(집행률 74.4%) 집행
- \* 디지털 뉴딜 6.3조원(81.6%), 그린 뉴딜 6.3조원(77.0%), 휴먼뉴딜 4.2조원(62.8%)
- 차질없는 재정투자로 디지털·그린경제로 전환 가속화, 포용 사회로 도약, 한국판 뉴딜 지역 확산 등의 가시적 성과창출 지속

<한국판 뉴딜 성과>

- ▶(디지털 뉴딜) AI 학습용 데이터(6월, 170종 개방), 모바일 공무원증(1월)·국민 비서(3월)·보조금 24(4월) 도입, 초중고 Wifi 31만실(6월), 보건소 스마트 헬스케어(7월, 160개소, 2.4만명) 등
- ▶(그린 뉴딜) 미래차 확산(7월 누적, 전기차 18.5만대, 수소차 1.6만대), 녹색산업 육성(유망기업 71개, 스타트업 400개) 등
- ▶(휴먼 뉴딜) 전국민 고용보험('20.12월 예술인, '21.7월 특고 등), 국민취업지원(7월, 37만명 신청), 청년디지털 일자리(7월, 6만명)
- ▶(지역균형 뉴딜) 지자체 우수사업 선정·특교세 지원(7월, 15개 지자체 300억원), 뉴딜분야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(7월, 4개소) 등

-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기술 분야\* 전문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 등 산업구조 재편 대응사업 집행 역점

\* 인공지능, 클라우드, 빅데이터, 블록체인, AR·VR, 자율주행차, 드론, 스마트공장 등

- ICT 이노베이션스퀘어\*를 통해 중소기업, 일반인, SW개발자 등 3,221명에 대해 AI·블록체인 등 SW 융합 기술 관련 교육 실시

\* AI기반·블록체인 등 SW분야 교육·개발·테스트·사업화를 지원하는 복합교육공간

-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및 산·학 연계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1,804명 석·박사를 양성 중이며, 非학위 과정의 SW 고급인재 양성\*도 병행

\* (이노베이션 아카데미) '20년부터 교육을 시작, '21.7월 기준 1-4기 1,103명 교육 중

- 1,682개 사업체에 대해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(0.2조원), K-Digital Platform 5개소를 개설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직무역량 훈련 지원

## □ 고용회복 및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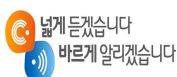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 위기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3.8만개 사업장(31만명)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(0.9조원) 등 고용충격 완화 지원

- 구직자 68만명에 대해 구직급여(7.5조원)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

- 학대아동 분리보호 등 적시대응을 위해 전국 시·군·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39명을 배치('21년 목표치 664명의 81.2% 수준) 완료

- 학대피해아동 쉼터 5개소를 신설(연말까지 29개소 추가 개소예정), 0~2세 학대 위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 113개 선정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9월호(배포용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[moefpr@korea.kr](mailto:moefpr@korea.kr)



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」(붙임)에 게재

**① 지역주도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추진 방향**  
(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전략팀장)

- (현황 및 문제점) 미래유망산업인 바이오 산업\*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구역 특구지정 등을 통한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화\*\*를 추진 중이나 클러스터 간 연계·협력이 부족

\* 2030년 반도체, 자동차, 화학제품 등을 추월하는 성장세 전망

\*\* 수도권, 경상권, 충청권, 강원권, 전라권을 큰 축으로 총 25개 운영 중

- 바이오산업은 高위험·高복합성\* 성격을 가지고 있어 리스크와 비용분담을 위한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

\* 막대한 R&D 투자비용 및 시간 소요, 낮은 신제품 상용화 가능성

- (개선방안) 클러스터 간 연계·협력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

- ① 공동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역량 진단·분석 결과를 지역간 공유하고 高위험·高수익 융합 R&D 사업에 공동 참여
- ② 클러스터 성장단계·기술 및 산업분야별 진단·분석에 기반한 혁신주체별 및 혁신기능별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

- (시사점) 국가·지자체간, 지자체·지자체간 역할 구분을 통한 연계·협력 강화가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

- 국가는 바이오 규제 개선 및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간의 연계·협업지원, 지자체는 클러스터 참여주체에게 R&D, 사업화 편의 및 정책지원 등 직접 지원에 집중

## ② 고령화시대 노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 (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- (현황 및 문제점) 빠른 고령화\*로 노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관련 사회적 수요는 지속 증가하나 재가급여서비스의 부족, 돌봄서비스 간 분절적 운영 등 한계 존재

\* ('00) 고령화사회(65세 이상 노인비율 7%) → ('18) 고령사회(14%) → ('25) 초고령사회(20%)

- 재가급여서비스\*가 부족하여 경증환자 중심으로 사회적 입원\*\* 등 불필요한 시설이용 증가

\*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·요양, 주야간 보호 등 제공

\*\*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되는 경증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현상

- 노인 관련 기존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 간 연계가 미흡하여 효과적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곤란

- (개선방향) 재가급여 확충, 서비스 간 연계·관리 강화 필요

- 방문간호·재활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 재가급여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진입을 예방
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시 입원필요도를 심사하여 중증노인 등 우선순위 높은 환자의 요양병원 이용이 용이하도록 개선

-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가능한 노인돌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'원스톱' 서비스 창구 개설 필요

- 요양시설내 전문인력(간호사) 배치기준 강화 등 서비스 질 개선

- (시사점) 노인돌봄 관련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존 돌봄서비스 간 연계 강화 필요

- '22년 정부 예산안에도 디지털 돌봄 및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등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사업 반영

-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도 추진

\*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: ('21) 8,701 → ('22안) 8,999억원(+3.4%, +289억원)

### ③ 중앙·지방 상생을 위한 1,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내용과 시사점(정남희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)

- (1단계) 국조실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재정분권 추진방안」 마련·발표('18.10)
  - 지방소비세율 인상('19~'20년 10%p)을 통한 지방세 확충
  - 중앙정부 보조사업 중 지역밀착형 사무(3.6조원) 지방 이양
  - 소방공무원 증원 등 관련 소방교부세율 인상('19~'20년 25%p)
- (2단계) 당·정·청 협의를 거쳐 재정분권특위 합의안 발표('21.7)

#### < 국가재원 지방이양 >

- (지방소비세율) 기능(2.3조원) 및 추가재원 이양(1조원)에 맞추어 세율 인상('22 2.7, '23 4.3%p)을 통해 '22 2.5조, '23 4.2조원 이양
- (지방소멸대응기금\*) 향후 10년간('22~'31년) 매년 1조원 정액 지원하되, '22년은 계획수립 등 준비기간을 고려 0.75조원 지원
  - \* 지자체(비수도권 기초 중심) 핵심인프라(주거, 통신, 교통 등)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중앙-지방간 협업체계(투자협약 등) 구축 후 지방이 자율적으로 집행
- (국고보조율 인상) 광역시 자치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복지사업 보조율을 맞춤형으로 조정(+0.2조원\*)
  - \* 기초연금(489억원),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(342억원), 첫만남이용권(1,171억원)

#### < 지자체간 재원 재배분 >

- (광역-기초) 지방교부세의 기초지자체 배분비중 확대(0.6조원), 국고보조사업의 기초 지자체 매칭부담 인하(0.4조원) 등
- (재원보전) 1단계 기능·재원이양 관련 보완조치 기간 연장
- ( 시도-교육청) 공동사업비 등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연계방안 검토

- (정책적 합의) ①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지방재정 여건 개선 ②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